

내수 진작책 ‘제대로’ 해야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국내 경제의 내수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금의 국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 확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0년 가까이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을 추구해 온 결과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외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대외 여건 변화에 우리 경제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신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진국의 예를 볼 때 한국이 앞으로 3만달러 소득의 경제 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내수 확대는 매우 절실한 정책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문제는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점이다. 내수 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은 내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산업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해외에 나가 지출을 하는 국내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해외 소비자들도 국내에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산업 기반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국내 내수는 커질 수 있다.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내수 증진책의 단골 주제로 제시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는 결코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더욱이 교육과 의료 서비스업의 경우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경기 침체기 때마다 근본적인 내수 기반 확대 정책이 아니라 임기응변적인 내수 부양책에서 대안을 찾으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내수 진작책으로 카드 대출 정책을 활용한 것이 이의 대표적 사례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는 급속히 성장률을 회복했다. 외신들은 한국 경제가 내수를 통해 성공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아쉽게도 이는 카드 버블 붕괴에 의한 국내 금융위기라는 또 다른 재앙을 유발하였다.

건설 경기 대책도 자주 활용되는 내수 부양책이다. 이 역시 내수 경기의 불씨를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실효성이 있는 내수 확대책은 아니었다. 과도한 신도시 건설 사업은 물가 폭등을 유발하고 소득 격차를 벌어지게 하여 오히려 내수를 축소시키는 주요인으로까지 지적된다.

지금도 내수 부양 유혹에 빠질 우려가 크다. 저금리 상황에서 가계 대출과 건설 사업을 늘리면 내수 경기는 빠르게 살아날 수 있다. 최근 들어 외국 투자기관들이 한국 경제의 조기 경기 회복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도 이러한 점을 감안한 것이라 보인다. 하지만 내수 경기 부양책에만 의존하면 자칫 자산 버블과 물가 상승을 동반해 내수 기반을 근본적으로 확충하기보다 국내 경기의 단기적 부침 현상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

미국 금융 불안과 세계 경기의 급속한 침체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는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 지금은 내수 확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 할 수 있다. 높은 대외의존도를 지닌 소규모 개방 경제가 대외 충격에 얼마나 큰 피해를 보는지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실감하고 있는 까닭이다.

내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잉태된 경제·사회의 취약점들을 해소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우선 그간의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초래된 인구 축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남한 인구 4500만명으로 내수를 키우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과도한 도시 집중 현상으로 인한 농업과 지역 경제 붕괴도 복원해 나가야 한다.

수출 주도 대기업 중심의 경제 발전으로 취약해진 내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 또한 중요한 과제다. 제조업 위주의 산업 정책으로 초래된 서비스업에 대한 편견과 과도한 규제는 이제 과감히 철폐되어야 한다. 남북 경협이 활성화는 남한의 인구 부족, 산업 수요 위축 등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모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단편적 정책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국내 경제성장 정책의 철학과 전략을 수정하는 차원에서 강구해야 할 문제다.